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 예산 증액 필요”

도의회 문체위, 김 도지사에 예산 증액 촉구 황대호 부위원장, 문체위 위원 뜻 담긴 피켓 전달



황대호 부위원장이 김동연 도지사에 예산 증액 필요성 관련 문체위 위원 뜻 담긴 피켓을 전달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영봉 위원장·의정부3)의원들은 김동연 지사에게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8일 도담소에 서 진행된 여야정 협의회 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문체위 위원들을 대신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담긴 피켓을 전달했다.

이날 피켓 전달은 경기도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와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체위 위원들의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3년도 문체위 소관 예산안 규모는 5,079억 9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9조 9265억원 중 1.65%로 전

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체위 위원들은 지난달 23일 경기도가 제출한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경기도민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이유와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바 있다. 2023년 예산안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예결소위 활동 과정을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응해 기관 목적에 부합한 사업에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감액 예산으로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의회 상임위가 끌어올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행부가 감액한 예산을 문체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정파를 뛰어넘어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복지를 위해 모두 합심하여 증액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닌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에게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민 누구나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이자 보편적인 복지이다. 예산 증액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다”고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추경안 심의과정에 이어 지난달 2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2023 본예산 심의에서도 경기도민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이유와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바 있다. 2023년 예산안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예결소위 활동 과정을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국가경제 안보 첨단산업기술 보호 힘쓸 것”

홍정민 국회의원



출 목적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양)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 주요 산업기술을 부정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침해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고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위헌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처벌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고의적인 유

발의했다.

한편 홍정민 의원은 최근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의 확보 여부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 통과로 주요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고양/고종우 기자 gj@hyundaiilbo.com

눈길끄는 도의원 의정활동

박옥분(수원2) 재난약자 인권보장제도 마련 시급

“재난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추진은 시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기념 2022년 수원특례시 인권포럼’ 토크자로 참석해, 재난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10.29 참사를 겪으면서 대비하지 못한 재난 앞에 온 국민이 통탄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슬하게 다짐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재난을 대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허술한 실정이다”며 “재난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 어느 곳에서 닥쳐올지 모른다. 소를 잃고도 외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10.29 참사에서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재난약자가 될 수 있음을 똑똑하게 목격했다. 재난약자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존,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이 수원시와 경기도 재난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옥분 의원은 “10만 인구가 넘는 수원특례시는 물론, 1,390만 명이 살고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만큼 각종 재난 발생의 빈도와 위험성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다”며 “재난약자의 생존과 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재난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재난약자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가칭)「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재난약자 보호는 물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10.29 참사를 겪으면서 대비하지 못한 재난 앞에 온 국민이 통탄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슬하게 다짐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재난을 대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허술한 실정이다”며 “재난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 어느 곳에서 닥쳐올지 모른다. 소를 잃고도 외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10.29 참사에서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재난약자가 될 수 있음을 똑똑하게 목격했다. 재난약자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존,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이 수원시와 경기도 재난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가 결핵협에 크리스마스 썬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결핵 퇴치 지속 관심·지원 이어가겠다”

인천시의회, 결핵협에 크리스마스 썬 성금

인천시의회가 결핵 퇴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갔다.

인천시의회는 9일 의정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

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핵 퇴치사업 동참을 위한 크리스마스 썬 성금 100만 원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회장 김심)에 전달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고양도시관리공사 누리버스, 안심도로 안전속도 정착 캠페인 ‘우수’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누리버스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올해 최초로 실시한 생활권 안심도로 내 안전한 속도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제한속도 준수 분야에서 경기북부 권역 운수회사 39개사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권 도로 중 안전한 속도, 안전한 도로 및 안전한 교통문화가 갖춰진 도로를 말하며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S.O.S 365” 캠페인이 초석이 됐으며 고양누리버스는 올해 4월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누리버스가안심도로안전속도 정착 캠페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사진: 고양도시관리공사 제공)

안전운전 습관화, 안전의식 고취 등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생활권 안심도로 및 이외의 일반도로에서도 교통안전 문화 정

착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종우 기자 gj@hyundaiilbo.com

편집·정다정 기자 jdd@

서성란(양성평등센터 3주년 기념 토론회) 추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은 8일 오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경기 양성평등센터 3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추사를 통해 “2019년에 개소한 경기 양성평등센터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은 개인·가족·지역·사회에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도 향상시키고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도 올라가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오늘 이 토론회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을 듣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양성평등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여성,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시작해 2019년 4월 ‘경기양성평등센터’로 확대 전환한 센터의 그동안의 4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성평등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김명선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유진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정현지 인천양성평등센터 센터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유미 성남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전문관, 김범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현대일보 www.hyundaiilbo.com
 22327 인천광역시 중구 셋골로 61 (도원동)
 발행·편집인 권오룡 인쇄인 김영건 편집국장 조성원

대표전화 (032) 8813-114 (031) 5320-114

회장실 (070)7458-0012	편집국장 (070)7458-0016	등록번호-인천가 00036(타일)
총무국 (070)7458-0011	편집국 (070)7458-0017	등록일자-1995년 5월 24일
광고부 (070)7458-0114	편집부 (070)7458-0018	창간일자-1996년 5월 30일
판매부 (070)7458-0014	사회부 (070)7458-0019	
팩스 (032) 8813-119	정경부 (070)7458-0015	

※구독료 월 15,000원 1부 700원 구독신청·광고문의 (032)8813-114